

● 노동운동 진로모색 Ⅱ



노동자 정치세력화, 평가와 반성

이근원

전국공익·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대 정치국장

1. 위기에 처한 노동조합 운동

“극단적으로 말해 우리 운동은 87년 이후 승리와 패배의 과정을 통해 성장해 왔지만 다른 면에서는 87년 이후 계속 자본의 공세에 밀려 위기의 상황까지도 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 상황을 들과하기 위해서는 정치세력화의 과제

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실천해야 할 과제로 세기되는 것입니다.”¹⁾

우리는 지난 10여년 동안 정치세력화를 실천과제로 부르짖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입에 벌린 소리거나 구호에 그쳐왔다. 그리고 98년이 저물어 가는 이 때, 노동운동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위기의 한복판에는 기업별 노조가 자리잡고 있다. 기업별 노조는 '전체' 보다는 자기 사업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노동운동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정부와 자본은 임금가이드라인, 총액임금제, 노·경총 합의 등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총자본'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기업별 노조로 대응을 모색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에는 대기업노조에서 상급단체 의무금을 보류시키는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다.²⁾

또 있다. 10여년 동안 민주노조운동을 포함한 노동조합운동은 임·단투 중심의 투쟁을 전개해 왔다. 물론 임·단투는 부의 공정한 분배, 노동자 삶의 개선, 의식고양 등의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노동조합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이기는 하다. 또 다른 측면에선 정부와 자본의 끊임없는 도발로 노동조합의 활동영역이 경제투쟁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투쟁은 결과적으로 조직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뿐이었다. 부분적으로 미조직노동자들의 임금향상을 가져오기는 했을지라도 그 한계는 명확한 것이다. 울산에서 한창 투쟁이 전개될 때도 택시를 타면 누

구나 한번은 들었을 얘기가 있다.

"아니, 그렇게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파업을 한단 말야?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해하겠지만 정말로 심한 것 아냐?"

우리는 민주노조를 지켜오는 데는 성공했을 지 모르지만 사회를 바꿔내는 데는 실패했다. 아니 정확히 사회적 인식을 바꿔내는 데 실패했다. 따라서 작게는 개인적으로 "너 아직도 그 짓 하니?"라는, 옛날에는 마음과 돈으로 지원하던 친구들의 질책을 듣거나 크게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다.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라는 정권의 이데올로기는 항상 통해 왔으며, 우리는 너무나 작은 집단에 머물러 왔다. 조직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데서 더 나아가 미조직노동자와 민중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고, 그것을 위해 투쟁해 온 적은 별로 없다. 조세, 환경,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본격적으로 투쟁해 본 적이 거의 없다.

민주노총의 사회개혁투쟁은 항상 임·단투의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중의 선봉에 서서 한국사회의 총체적 변혁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는 교과서에만 있었다. 경제적 지위향상의 효과는 있었으나 정치적 지위는 보잘것없다. 따라

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월례토론회,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97년 대선」, 양경규 당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노동사회」 97년 7월호.

2) 한국통신에 이어 현대자동차 등 거대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 부족'과 '지원미비'를 이유로 민주노총과 상급단체의 맹비 납부를 보류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민주노총 맹비 6개월간 지급보류 결정" 매일노동뉴스 11.17일자)

서 군부독재에 맞서 투쟁해 온 80년 대 학생운동 지도자들이 얻었던 국민들로부터의 호감을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받고 있지 못하다. 설문조사를 해 보면 노동조합이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노동자의 본격적인 정치진출을 목적으로 했던 지난 15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민중들로부터 '배반' 당하고³⁾, 한국노총은 DJ로부터 배반당하는 결과가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말하고 있다. 아니 좀 더 구체화하여 '노동자가 중심이 된 진보정당'을 건설하고자 하는 일정을 잡고 있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김동춘 교수는 "사회세력화 + 정치세력화"로 보면서 '노동자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⁴⁾

그는 "노동자들이 얼마만큼 정치적으로 조직화하여 계급간의 균열을 정치적인 영역 내에서 투명한 갈등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는 가장 일차적인 과제이다. 정치세력화는 구체적으로는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당의 결성, 그것의 영향력 여부로 판가름 난다"고 말한다. 어떻게

규정을 내리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란 노동자가 그만큼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그 영향력으로 사회를 개조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정치를 경멸하는 자는 경멸스러운 정치만 가질 것이다."⁵⁾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주제는 "노동자도 인간이다"였다. 그러나 외국에서 온 노동조합 운동가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높은 투쟁성에 놀란 다음, 한국 노동자들의 형편없는 정치의식과 정치사회적 지위에 대해 놀란다고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는 정녕 인간인가? 20여년 동안 정규교육을 받고 묵묵히 일만하다 어느 날 갑자기 산업폐기물처럼 정리해고 되는 노동자, IMF 사태를 몰고 온 원인이 노동 외부에 있음을 사회가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노동자, 여전히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는 신념으로 퇴출 노동자에게 쇠파이프를 들이미는 풍토에서 노동자는 정말로 '인간'인가?⁶⁾

한국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동질성을 얼마큼 갖고 있는 것인가?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 지난 88년 처

3) 조현연, 「희망의 정치와 진보정당운동」, 1998 비판사회학 대회발표 논문.

4) 김동춘, 「노동자와 정치세력화」,『FIET-KLC 노동자 정치세력화 지도자 코스』, 1998. 11.12~14.

5) 일본 전센동맹 제54차 정기대회, 高木剛 회장 인사말

6) 동아그룹에서 퇴출당해 5달 기까이 투쟁하고 있는 동아엔지니어링 노동자들에게 동아건설노동자들이 쇠파이프와 각목을 들이미는 사건이 있었다. 「매일노동뉴스」 98년 10월 30일자.

음으로 노동자투쟁이 일어난 이후 울산에서 현대중공업 '노동자' 김진국과 현대중공업 '자본가' 정몽준의 대결이 있었다. 국회의원 선거였다. 갑옥에 갇혀 있는 김진국을 후보로 내세워 선거에 참가한 노동자 진영은 "노동자계급의 도시"에서 자본가 후보에게 참패했다. 그리고 92년 대통령 선거, 콜리앗 투쟁을 거친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아산 간척지에서 난 쌀을 포대로 선물하는 정주영, 하지 만 얼마 전 "육해공군을 동원한 물리적 진압"으로 노동자들의 아 이들까지 내몰았던 장 본인인 정주영에게 물 표를 던졌다. 한국 노동자계급을 대표한다 던 울산 현대 노동자들의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은 이렇게 갈 라서 왔다.

90년대 초반, 울산에 있을 때의 한 토막 기억.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노동 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얘기하며 태화강 청소를 나간 적이 있었다. 환경을 정화 하자는, 태화강을 살리자는 취지였다. 노동조합이 지역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 때 장사를 하던 한 주민의 얘기, "저놈아 들, 또 머리띠를 묶을 때가 됐구먼!" 그 리고 얼마 안가서 정말로 머리띠를 묶



었다. 또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해고되었다. 무엇인가? 노동자를 옮아 매고 있는 것이! 우리는 작업장 문제에서, '작업장 권력'에서 한발도 전진하지 못했다.

또 하나의 기억. 지난 대선 때 기아차 동차에 권영길 후보가 유세를 나갔다. 이·취임식이었던가? 차가운 겨울바람

이 쟁쟁 부는 광장엔 그나마 참가한 노동자들도 적었다. 한창 민 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축사를 하며, 정리해고 반대를 주제로 말하고 있는데, 덩치 큰 한 노동자가 계속 큰 소리로 방해하고 있었다. "왜 나와 가지고 저랄이 야? 지가 정치를 뭘 안다고!" 더 이상 글로

옮길 수 없는 욕을 자신의 상급단체 위원장에게 퍼붓고 있던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있었다.

또 다른 일상. 연맹의 정치위원장이 있다. 기획예산위원회의 구조조정이라는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그를 두고 회사측은 거짓 공세를 편다.

"정치에 야심이 있어서 민주노총과 연맹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위원장은 연맹의 정치위원장이다. 다른 공기 업들은 조용한데 유독 우리만 시끄러운

것은 모두 위원장의 야망 때문이다” “그래? 우리가 위원장 하나는 잘 뽑았구먼. 도대체 노동자가 권력을 잡겠다는 야망도 없이 무슨 노동조합을 하겠다는 거야?” 누구도 이처럼 따지지 않는다.

조선일보로부터 한창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최장집 교수는 어떤 글에선가 “한국의 노동자들은 계급으로서의 일체성을 가지는 데 실패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맞다. 노동자니까 노동자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단순 무식함 이전의 동질성을 우리는 가져 본 적이 없다. 정치에 대해 관심이 세계 제일인 사회에 살면서도, 100사람이 모이면 120가지도 넘는 정치적 식견을 자랑하면서도, DJ니 JP니 YS의 고향과 학벌과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그리 잘 알면서도, ‘술집 정치’에서는 그리고 날카롭고 해박하면서도 현실 정치에서는 항상 무기력한 것이 오늘의 노동자다. 말은 많으면서도 아는 것은 별로 없는 것이 오늘의 노동자는 아닌지, 학연과 인연, 혈연이 계급적 단결을 압도하는 것이 오늘의 노동자는 아닌가?

3. 쉽게 갈라지는 운동, 축적 없는 운동

이미 10여년을 붙들고 있는 노동자의 화두인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그럼에도 생각의 차이는 예상외로 크다. “노동자 정치의 기본 형태는 ‘제도권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 대중의 직접적인 대중적 정치투쟁’, 즉 ‘비제도적 대중정치’의 형태여야 하며, 제도 정치권으로의 진출은 어디까지나 비제도적 대중정치의 형태로 전개되어야 하는 노동자 정치의 제도 정치권으로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다시 말해 정치운동과 대중운동의 분리 = 정치운동의 대중운동으로부터의 자립화라는 입장이다.⁷⁾

“위기에는 대중의 계급적 자각, 정치적 의식이 급속히 심화된다. 위기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타개해 나가려는 투쟁의 중심축이 확고히 서고 계획적 사업을 실행할 때 이는 더욱 촉진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가능하고 필요한 지점이 여기에 있다. 위기에서 대중투쟁은 정치적 대중투쟁으로 급속히 전화 발전하고, 이 정치적 대중투쟁을 조직적으로 수립하여 정치조직을 건설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대중투쟁 중심론도 있다.⁸⁾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두고 ‘개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느니, 필연적으

7)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현시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하여」,『FIET-KLC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WORK SHOP』, 1998.1.21~23.

8) 정운광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노동운동의 위기를 정치세력화의 계기로!」,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소식지『정치소식 창간준비 1호』, 1998.11.12



우리는 민주노조를 지켜오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사회를 바꾸려는 데는 실패했다. 미니 철학의 사회적 의식을 바꿔내는 데 실패했다. 사진은 97년초 노동법총파업 여의도 집회.

로 노동자들의 의식을 “쁘띠 부르주아” 사상에 빠지게 할 것이라는 등의 비판은 끊임없이 있었다. 이런 생각의 기초에는 고전적인 전위 정당 사고가 깔려 있거나 혹은 대중투쟁 만능의 생디칼리즘(syndicalism) 성향이 깔려 있다. 여기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 나가는 다양한 활동은 ‘투쟁’이라는 양상한 한마디로 단순화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승리 21」은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한 오른쪽 세력에게는 “정리해고 반대만을 외치는 노동자 중심의 좌 편향”으로 질책 당하고, 정치연대를 중심으로 한 왼쪽 세력

에게는 “노동자를 봉급생활자로 대체한 우 편향”으로 비판당하기도 했다. 선거라는 하나의 작은 전쟁을 치르면서 내부의 심한 전통을 않았다. 한 학자는 진보정당 건설을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을 ‘진보정당 건설론’과 ‘시기상조론’, ‘원천적 부정론’ 등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시기상조론을 다시 ‘준비론’과 ‘민주연합론’, ‘전선조직 강화론’ 등으로 나누고 있다.⁹⁾

문제는 이런 정파 대립과 이념의 폐쇄성이 고질 병폐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한발 더 나가려는 노력이 없다. “우리는 너무나

9) 조현연, 앞의 글

10) 배기남(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 「최근의 진보정당운동 및 대선 투쟁 팽기와 앞으로의 방향」, 1998.11.18.

잘나서 그런지 분열만 잘해왔다” “내부 정치의 부재, 이것이 치유되지 않는 한 진보정치는 관념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¹⁰⁾

어차피 진보정당을 부정하는 세력을 이야 함께 할 수 없겠지만 동의하는 세력 안에서도 우리는 너무도 쉽게 갈라선다. 지난 92년 백기완 선거대책본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념적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데에는 운동권 내부의 분열이 한몫했다. 「국민승리 21」 역시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전술로서의 대선 참여’를 거쳐 본격적인 ‘전략으로서의 진보정당 건설’을 제대로 논의하기도 전에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다.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이 백화점의鄧치와 품질을 요구하는 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구멍가게를 차리는 데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진보정당 건설과정에서 뭉친 세력을 은 ‘일정 기간 동안 탈퇴 불가의 원칙’과 ‘당비 납부 회원 수에 따른 권한 배분의 원칙’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합의해야 한다는 빠있는 조건을 내걸기도 한다.¹¹⁾

다른 한편으로 노동운동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다는 조건도 있다. 언젠가 전북에서 전노협의 핵심 간부를 하던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24시간 편의점

을 운영하고 있었다. 꽃가게를 하거나, 심지어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도 있다. 해고되어도 생계비가 보장되는 일부 대기업 해고자를 제외하고 운동을 계속하기는 어렵다. 어렵지 않은 조건을 가진 경우에도 노동조합 안에 자리가 없어서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연맹 위원장의 경선은 물론 단위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도 경선이 이루 어지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끝난 지하철 선거에는 노동조합에 닥친 어려운 투쟁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명의 후보가 출마하기도 했다. “운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을 100% 믿을 수야 없겠지만 별다른 전망이 없는 노동조합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더 이상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진 사람 일부는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운동을 정체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세대의 운동 참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고인 물처럼 썩어가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know-how와 know-who의 축적을 방해한다.

4. 남는 문제들

① 주체문제

문제는 대통령 선거의 성과를 어떻게

11) 조현연, 앞의 글

남기는가의 문제다. "중앙에서 「국민승리 21」의 향후 진로와 관련 조직명칭 변경여부에 상관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지속되어진다면 전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만약 해소되면 지역차원에서는 독자적 구조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 필요하다" ¹²⁾는 소박한 요구에 답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이어 받아 정파적 이익에 따라 조직을 유지하려는 의도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것" ¹³⁾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승리 21」은 내년 5월까지 창당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의원 대회를 통해 "국민승리 21을 확대·재편하여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적극 지원·연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국민승리 21」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아니다. 이것은 "민주노총=진보정

당이 되어 정당의 형식을 벗린 조합주의에 불과할 것" ¹⁴⁾이므로 "노동조합 안에 정치선전·선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¹⁴⁾

그러나 이는 「국민승리 21」과 민주노총의 조직적 관계에 대한 무지, 그리고 대의원대회의 결정이라는 대중조직 최

고의사결정기구의 결정을 무시·왜곡하는 행위일 뿐이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안, 예를 들면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에는 분개하는 반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가 형식적으로 열렸으므로 문제

가 있다고 반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쨌든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국민승리 21」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

② 이념문제

12) 「경주시의 97년 대선 활동 평가(안)」, 「민주노총 15대 대선 평가 보고서」

13) 이종희(정치연대준비위 상황설정), 「97 대선 투쟁 평가(안)」, 「97 진보진영 대선 투쟁 평가와 김대중 정권하 노동자 정치 운동의 가능성」, 국민승리 21 서울특별시본부.

14) 최혁(청년진보당준비위 대표), 공익노련 주최 젠더토론회, 「진보정당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1998.10.14.

15) 주대환(국민승리 21 청당기획위원), 「진보정당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위 공익노련 토론회

“현대적 사회주의 사상에 기초해야 한다”며 “100년 후를 말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취적인 정치적 상상력을 가져야 하지만, 10년 후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유럽 좌파정당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 그들의 경험과 이론이 필요할 뿐이다”라며 사회민주주의 사상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¹⁵⁾

이에 대해 “유럽식 사회주의는 전혀 새로운 사회주의가 아니며, 우경화 하여 집권에 승리하여 집권에 성공했을 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¹⁶⁾

또 이 모두를 비판하면서 노동운동의 대원칙, “자본 중심 또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 있는 지배계급 중심의 소유·경영·분배구조를 ‘계급이 존속할 수 없는 노동중심의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유로운 생산자연합’(자유인들의 연합체)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¹⁷⁾

진보정당이 이념을 중심으로 한 결사체라면, 그리고 우리가 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전면적 개편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의 이념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형적 결론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열린 태도로 지혜를 모아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③ 정치토론의 활성화

그리고 ‘어떤 세력들과 함께 할 것인가’, ‘실패하지 않는 진보정당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관계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노동자 중심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등 진보정당의 계급적 토대와 성격, 건설 경로 등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과 「국민승리 21」은 11월 18일 대선 평가를 한 1차 토론회에 이어 총 3차에 걸친 대중토론회를 통해 이를 집약시켜 나갈 예정으로 있다.

5. “우리는 멀고도 험난한 길을 걸어왔지만 되돌아기지는 않겠다”-제시 짹순

노동조합이 책임져야 한다. 지금까지 진보정당 운동이 실패한 이면에는 노동조합의 무관심과 비협조가 존재했다. 이제 노동조합운동 스스로 달라지지 않고서는 ‘동동함’과 ‘연대’의 논리가 아닌 ‘자본’과 ‘경쟁’의 논리가 판치는 한국사회를 개조할 수 없다.

한국 노동운동은 이념을 가져야 한다. 한국 사회를 개조할 프로그램을 가

16) 정윤광(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위 공익노련 토론회, 「세상을 바꿀 계획과 의지를 갖고 열린 태도로 과감히 나서자!」

17) 송태경(「국민승리 21」정책위원), 「노동의 정치를 위한 비판적 연구」, 민주노총 CUG, 시민의 소리 1538번, 1998.10.29

져야 한다. 이불 속에서 백 번 혁명을 외치기보다는 하나씩 '개량'을 쟁취해 나가는 실천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 활동을 폭을 확장해야 한다. 작업장을 벗어나 전체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고 투쟁해 나가는 선진부대가 되어야 한다. 환경, 조세, 심지어 사교육비까지 노동자와 무관한 것은 없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총파업을 벌일 수 있을 때 우리가 그토록 부리워하는, 공공 노동자들의 파업에 불편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박수를 보내는 성숙한 시민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는 사회적 힘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진보정당을 노동자의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 영국 노동당의 경우 당원 중 조합원 비중이 90%에 달했던 적도 있었다. 독일의 경우 72년 연방의회 의원 518명 중 DGB 조합원이 250명이었고, 이들 중 222명이 사민당원이었다. 브라질 PT당의 1차 임시지역위원회 위원의 60%는 조합원이었다.

물론 이들 정당들이 반드시 우리가 추구할 노동자정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름대로의 역사와 조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옹원단'에 만족하고 있는 일본 노동자들, 무려 400억원에 달하는 선거자금을 바치면서 클린턴의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미국의 노동자들 같은 '정치 구경꾼'이

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한다.

이제 진보정당은 '구호'나 '필요성'의 영역을 넘어서 노동자들의 생존전략이 되어야 한다. 21세기 한국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진보정당의 이념, 노동조합과의 관계, 건설 경로 등 모든 것에 대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노동자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다양한 계급과 세력을 규합하느냐에 따라 진보정당의 성패는 좌우될 것이다. ♦♦♦